



[전문가 증시 진단]
무역분쟁 약재
지수 하단 2250
저가매수 노력할 만
02



Economy

코스피	2272.76 (+1.22)	코스닥	795.71 (+5.89)
금리 (미국 3년)	2.14 (+0.02)	환율 (원/달러)	1118.70 (-1.30) (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 주요 내용

세율 변동폭	과세표준	현행 (%)	권고안 (%)	인상분 (%)
주택	6억원 이하	0.5	0.5 (유지)	-
	6억원 초과 구간	0.75	0.8	0.05
	12~50억원	1.0	1.2	0.2
	50~94억원	1.5	1.8	0.3
종합합산 토지	15억원 이하	0.75	1.0	0.25
	15~45억원	1.5	2.0	0.5
	45억원 초과	2.0	3.0	1.0
별도합산 토지	200억원 이하	0.5	0.7	-
	200~400억원	0.6	0.8	0.2%p 인상
	400억원 초과	0.7	0.9	-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시가·세율 동시인상 35만명 1.1% 더 낸다

중부세 인상 최종 권고안

정부가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중부세)를 손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서울도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의 과세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분야 권고안에는 ▲중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중부세 개편안은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센 방안으로 확정됐다.

중부세는 과세표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인상도 함께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 ▲94억원 초과 2.0%→2.5% 인상을 제안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분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은 전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린다.

특위는 이번 중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라고 예상했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 900억원, 종합 5500억원, 별도 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중부세 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노총 복귀 최저임금위, 심의 돌입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참석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제외한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만큼이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달 14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무분별 구속·압수수색에 기업만 멍든다

여론몰이 따라가다 檢신뢰 추락

흔들리는 검찰권위

(中) 구속영장 기각률 20%

검경의 잦은 재계 압수수색 기업 업무마비에 생산성 뚝 법원에선 영장기각 잇따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으로 기업의 업무가 마비돼 '엄정한 잣대'가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속요건 보다는 여론의 관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면서 검경의 '수사편의주의'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수 도미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4일 기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 여론몰이 수사가 많다"며 "이씨의 갑질을 시골 갑부가 똑같이 했다면, 누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구속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비

난 받아 마땅한 일과 구속수사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다 보니,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반복되는 영장기각 20% 육박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기각률은 높은 편이다.

3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19%(청구 3만5102건·기각 6682건)에 이른다. 2015년~2017년 3년간의 기각률 역시 18.2%(청구 11만3555건·기각 2만706건)로 비슷했다. 다섯 번 중 한

번 꼴로 영장이 기각되는 셈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기각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만 16만8290건에 이른다. 반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은 10.74%(청구인원 18만8560건·기각인원 2만270건)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의혹이 일어날 때마다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압수수색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순간, 업무가 마비되고 회사의 평판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과 검경, 국세청의 잦은 압수수색으로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기업에 손실이 된다"며 "특히 압수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긴 데다,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3·1 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첫 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빈들과 대장정의 출발을 알리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주회사, 내부거래비중 55%... 제도개선 나선다

공정위, SK·LG 등 18곳 분석 손자·증손회사 지분 늘려 총수일가 지배력 급격 확대

대기업 지주회사가 배당보다는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지주회사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지주회사·소속회사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다.

18곳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LS·제일홀딩스(하림)·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한라홀딩스(한라)·세아홀딩스(세아)·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한솔홀딩스(한솔) 등이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반대로 배당의(외)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을 앞질렀다. 브랜드수수료(간판값),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이 더 큰 돈줄이었던 셈이다.

셀트리온의 매출은 100% 배당외 수익이었다. 한국타이어(84.7%), 한솔(78.8%), 코오롱(74.7%)의 배당외수익 비중도

70% 이상이였다.

지주회사 출자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한 형태가 관찰됐다.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2006년 15.8개였지만, 2015년은 29.5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자 회사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의미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